

기로에 선 국민의당...활로찾기 고심

이준서 성장 청구...민주 공세 강화 속 정치적 파장 예고 이유미 남동생도...영장심사 결과·안 입장표명에黨 명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동생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제보 조작 자체는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할 소홀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나오면서 국민의당엔 비상이 걸렸다.

당의 진상조사 결과, 이유미씨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데다 그동안 지도부와 이번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당은 이날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 발언이

후 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에서 추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결국 추 대표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검찰을 압박해 국민의당 죽이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미애 여당 대표가 미필적 고의 운운하면서 검찰에 대응해 수사 지휘를 하더니 검찰이 결국 이를 외면하지 못했음에 다행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권력 시너로 또다시 이용하려고 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럽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검찰 수사 결과를 마냥 부정하기도 어려운데다 민주당 차원의 '국민의당 죽이기' 주장도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태를 풀어갈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에서 1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함께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협치를 위해 비판의 톤을 낮췄던 원내의 분위기도 적극적인 공세로 바뀌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검찰 결과를 수용하고 그동안 잘못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남 탓하면서 추경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국민의당을 겨냥했다.

백해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당의 '셀프조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엄청난 범죄에 국민은 경악하고 책임 있는 인사들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는 반드시 추경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차 목표로서는 추경안의 11일 본회의 상정은 여야 갈등으로 물 건너간 상황이다.

따라서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1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막 선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함에 따라 일단 10일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다만 야 3당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은 20명에 불과, 추경 심사 착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의 2차

꼭 막힌 추경

오늘 예결위 3野 불참 가능성...직권상정 가능성도 희박

일자리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지만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 본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인사청문 대치 정국과 맞물린 야 3당의 반대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는 반드시 추경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차 목표로서는 추경안의 11일 본회의 상정은 여야 갈등으로 물 건너간 상황이다.

따라서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1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막 선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함에 따라 일단 10일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다만 야 3당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은 20명에 불과, 추경 심사 착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의 2차 채택 시한이 10일로 다가온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청와대가 임명한다면 야 3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추경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전망이다.

여야 대치로 추경안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없고 요건이 까다로우며 현실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지정한 기일 내에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지만, 현재 지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의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일은 추경의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정 의장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여당이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관건이지만 대치 정국을 풀어야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의 2차

추미애-우원식 與 투톱 엇박자

秋 국민의당에 연일 날선 발언 禹, 野 협조 끌어내기 안간힘

여당의 투톱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정국 현안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이 걸린 7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사실상 정반대 행보를 보이면서다.

우선 추 대표의 대야(對野) 메시지는 지지층을 향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협치를 이끌어내기보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야당과 날을 세우며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서 보여 준 추 대표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번 사건을 놓고 추 대표는 "대선공작 게이트", "꼬리 자르기가 아닌 머리 자르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책임"이라며 연일 국민의당을 공격했다. 국민의당의 반발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지만 추 대표는 꺾이지 않고 있다.

반면 야당과 협상을 책임지는 우 원내

대표는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인사와 추경 모두 반대 기조인 한국당에는 "대선 불복이나"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국민의당에는 "한국당 편을 들지 말고 추경 심사에 임해달라", 바른정당에는 "개혁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졌다.

이는 인사·추경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호남이 지지기반인 국민의당과 사안별 공조를 꾀하고, 이를 토대로 바른정당을 견인해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분리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비판하더라도 선(線)을 넘지 않는 모습이다.

우 원내대표의 대야 기조는 사실 예견된 수순이기도 하다.

군이 '협치 정신'을 들지 않더라도 정당별 원내 의석수 현황을 고려하면, 집권여당 홀로 할 수 있는 제로(0)에 가깝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120석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 협조 없이는 추경 심사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국무위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투톱간 엇박자 행보를 역할 분담론 차원에서 설명하는 시각도 있다. 박범계



민주당 추미애·세종서 최고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충남 천안충구센터에서 열린 추남·세종 민심경청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입을 굳게 다문 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는 당의 일이, 국회에는 국회의 일이 있다"면서 "당은 국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당원과 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대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대표의 거친 발언이 국민의당의 강경대응과 야3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원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원식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돌아서면서 추경 진행 등이 '울스톱' 되면서다. 추 대표의 일련의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집권여당 대표가 아닌 야당 대표 같다는 불만소리가 나온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송영무·조대엽 '정국 뇌관' 부상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한국당·바른정당 "임명시 보이콧"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가 정국 최대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귀국 당일인 10일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모두 후보자 자신사퇴와 지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이후인 1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여야 관계가 급랭하며 사실상 7월 국회가 개점휴업으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귀국 후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하면 7월 임

시국회는 물 건너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도 송·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보이콧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파문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이후 국회 일정에 전면 불참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9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로 당내 상황이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새 정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해야 개혁 과제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어 여권 전체적으로 임명 불가피론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다만, 임명을 강행으로 정국이 급랭하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의 7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에서 임명 시기를 늦추며 야당을 좀 더 설득하자는 의견도 나와 주목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분양 전환 아파트 24/35 PY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가격 싹박

분양문의 (062) **610-9232**